

오피니언

데스크시각

김주정



대학시절 읽은 그리스 신화 한 토막이 떠올랐다. 민주당 광주시장 입지자들이 서로 자신에게 유리한 방법으로 경선해야 한다고 싸우는 것을 보면서다.

그리스 신화 테세우스의 이야기 중에는 '프로크루스테스'(Procrustes)라는 노상 강도가 나온다. 그는 아테네 교외 케피소스 강가에서 살면서 여행객을 집에 데려가 침대에 눕히고 몸이 침대보다 짧으면 잡아 늘리고 길면 가지 없이 잘라버렸다. 여기서 침대는 제 맘대로 세상을 재단하는 아집과 편견의 상징이다.

아집과 편견의 상징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시민배심원제 도입 논란에도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는 놓여있다. 배심원제 도입을 희망하는 쪽은 국민경선으로는 개혁적인 후보를 뽑을 수 없고, 이렇게 되면 수도권 등 전국 선거에서 승리할 수 없다는 주장을 편다. 2012년 총선과 대선을 앞둔 마지막 전국 단위 선거이니 이번에 이겨야 정권을 잡

을 수 있다는 논리다.

반대하는 쪽은 이 제도가 민의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겠느냐는 입장이다. 소수의 배심원들이 과연 독립된 객체로서 공정한 잣대로 후보를 선출할 수 있겠느냐

선거관의 프로크루스테스들

고 반문한다. 배심원단이 후보를 압축한 뒤 시민참여경선에 부친다고 하더라도, 어떤 기준으로 자를 것이며 배심원단을 뽑을 수 있겠느냐는 주장이다.

물 다 그럴듯하다. 정권을 잡아야 한다는 주장도, 민의를 제대로 수렴해야 한다는 논리도 솔깃하다. 그러나 후보들의 속내를 들여다보면 생각이 달라진다. 여론 조사에서 뒤지는 후보들은 배심원제 도입을, 앞서는 이들은 시민참여경선을 더 선호하고 있는 것이다. 그럴듯한 대의명분 중 자신에게 유리한 것만 골라 고집하고 있다는 비난이 나올 법하다.

시장 출마를 선언한 국회의원들의 의원직 사퇴 논란에서도 '프로크루스테스'의 그림자가 어른거린다. "국회의원 하라고 밀어준 민의를 거스를 것이냐"는 물음에 "민이 가장 나가라는 것이다"라고 답하는 것은 아무래도 억지스럽다. 사퇴하라는 쪽이나 버티는 쪽이나 도대체 시민의 뜻을 제대로 물어보고들 하는 소리인지 모르겠다.

문제는 이런 논란의 와중에 위기에 처한 지방자치 살리는 방법에 대한 고민은 끼어들 틈조차 없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다. 지방선거가 지방자치를 살리는 기회가 아닌, 대선이나 총선 승리의 디딤돌 정도로 취급 받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최근 광주를 찾은 정세균 민주당 대표의 발언에서도 이런 분위기는 묻어난다. 그는 "호남이 변화에 앞장서야 한다"며 시민배심원제 도입 등 개혁공전을 시사했다. 민주당이 득권을 유지해온 광주·전남에서 먼저 변화를 견인하지 않는 한 지방선거에서 수도권 민심도 사로잡을 수 없다는 주장이겠지만, '구태의연한 호남' 때문에 민주당이 중앙정치권에서 고전하

고 있는 것처럼 해석되는 대목이다. 중앙당 스스로 변하지 않으면서 호남에만 '변화'를 앞세워 '줄서라'는 의미로 읽혀질 수 있다.

차지 살리는 선거돼야

사실 '줄서기'는 지방자치의 중앙예속이라는 말로 이해될 정도로 폐해가 심각하다. 광주·전남의 경우 '민주당 공천=당선'이라는 현실 때문에 지역구 국회의원이나 중앙당 실력자에게 잘 보여 공천권을 따려는 인사들로 넘쳐난다. 이 과정에서 능력과 자질보다는 연줄과 금품이 더 약효를 발휘했고, 이는 결국 지방자치의 부실로 이어졌다. 정당이 공천한 술한 단체장이 금품 수수 등 비리로 중도하차한 것이 그 증거다.

같은 잘못을 되풀이할 순 없다. 광주 5개 자치구 모두 직인 급여도 줄 수 없을 정도로 재정이 열악해 언제 부도가 날지 모르는 상황이다. 전남의 시군들은 더 힘들다.

정부의 잘못이 크다. 민주당이 잘한 것도 없다. 민주당은 어떻게 해야 지방자치를 살릴 수 있느냐를 먼저 고민해야 한다. 그것이 재집권의 첫걸음이다.

거리의 왕으로 군림하던 프로크루스테스도 결국 테세우스에 잡혀 같은 침대에 눕게 됐음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정치부장> jnews@kwangju.co.kr

시설

안타까운 광주시향의 서울연주 무산

광주시립교향악단이 광주민중합창 30주년을 맞아 추진했던 말려 교향곡 '부활'의 서울연주회가 무산돼 아쉬움을 주고 있다. 부활 공연은 광주시향 단원과 오디션을 통해 선발된 일반 시민들로 구성된 시민합창단 등 518명의 연주자가 참여하는 의미있는 프로젝트로 기대를 모았었다. 그러나 지난해 예술의전당 대관 심의과정에서 탈락한 뒤 마땅한 공연장을 확보하지 못해 서울 연주회를 접을 위기에 처했다.

부활의 서울 연주는 단순한 지방 연주단체의 연례적인 공연이 아니라, 5·18 30주년을 맞아 서울 시민들이 광주 민주항쟁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다. 점에서 지역민들의 실망감이 더욱 크다.

5·18 30주년 기념행사를 국민 통합의 계기로 삼겠다는 것이 정부 방침이다. 국가보훈처는 이명박 대통령이 참석한 올해 업무보고에서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을 영·호남은 물론 충청, 강원지역

주민들이 모두 모이는 국민통합 행사로 만들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민통합 행사로 만들기 위해서는 서울을 비롯한 전국 주요 도시에서 대체로운 30주년 기념 공연 등을 개최해야 한다. 5·18 관련 대형 문화행사의 타지역 개최에 정부가 적극적인 관심을 보여야 하는 이유다.

부활의 서울 공연 무산은 5·18의 전국화가 아직 멀었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1980년 당시 광주시민들의 반독재 민주화운동은 이미 세계 여러 지역에 널리 알려졌다. 반면 전국화의 길은 더디고 험난하기만 하다. 국가 기념일로 지정된 뒤 5월 정신이 계승 발전되기는 커녕 오히려 퇴색되고 있지는 않은지 반성해야 할 때다.

올해 5월 정신의 세계화와 전국화의 새로운 전기로 삼아야 한다. 저러나 청소년들에게 5·18의 참된 의미를 심어주는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개발도 시급하다.

'4인 선거구' 분할 一黨 독식 우려된다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광주지역 기초의원 '4인 선거구' 분할 문제가 대두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광주시 자치구의원 선거구 확정위원회는 지난달 광복절을 앞두고 4인 선거구에 대해 현행 6곳을 유지하고, 2인 선거구는 4곳, 3인 선거구는 9곳으로 총 19개 선거구 59명의 구의원을 두는 '구의회 의원 선거구와 의원 정수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마련했다. 그러나 시의회는 6곳의 4인 선거구를 2인 선거구로 분할하는데 의견을 모으고 오는 5월 임시회에서 조례를 개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광주 희망과 대안, 광주·전남 여성정치네트워크 등 시민단체와 민주노동당, 진보 신당, 국민참여당 등 야 3당은 "선거구 분할을 통해 이미 지방의회를 독점하고 있는 민주당이 또다시 지방의회를 독차지하겠다는 의도"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하지만 선거구 분할을 염두에 두고 있는 시의회 측은 "같은 동을 나누어 선

거를 치르는 것은 관리나 효율성 면에서 문제가 있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물론 양측의 주장은 나름대로 일리가 있다고 하겠으나 속내를 보면 시의회의회의를 민주당 의원들이 장악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초의원마저 민주당이 독식하겠다는 심산이다. 과거 지방선거에서 보듯 기초의원 선거구가 2인인 경우 민주당 후보가 거의 당선되지 않았는가. 또한 시와 시의회의 추천으로 선임된 선거구 확정위원들이 산고 끝에 도출한 합리적 안을 의결 권한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의회가 변경하려 한다면 승복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렇지 않아도 민선 4기를 거치는 동안 지방의회는 일당 독점으로 인해 부작동이 끊이질 않았다. 본연의 임무인 집행부 견제를 외면하고 '대의'보다는 '발그릇' 행기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의회 무용론'까지 대두됐다. 인위적인 지방의회 장악은 폐해만 안산할 뿐이다.

기고

정필연



21세기는 언제, 어디서, 누구나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유비쿼터스 교육체제가 요구되는 시대로서, 다양한 분야에서 각자의 재능을 발휘하는 글로벌 인재를 필요로 하고 있다.

이러한 시대에 학생 개개인이 지닌 잠재력을 개발하여 국제 경쟁사회에서 한 분야의 리더가 되도록 인재를 육성하는 일은 국가적으로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그렇지만 학교교육의 현실은 대학입시에 얽매어 나머지 학생 개개인의 다양한 재능은 사장되고 일수였다. 그래서 대학교에 진학하고서도 자기 정체성

어떻게 교육'에서 창의성과 잠재력을 중시하는 '뜨집어내는 교육'으로 전화되어야 하고, 이를 광주에서부터 출발했다"고 극찬하기도 하였다.

또한, 참석한 1천200여 명의 교육관계자들과 교장선생님 및 학부모님까지도 이 프로젝트는 앞으로 나아가야 할 교육의 방향이라고 공감하였으며, 교과부에서는 앞서가는 교육정책으로 전국에 소개해 주기도 하였다.

올해에는 지난해의 결과를 바탕으로 창의·인성교육의 강화와 학생 재능을 진단하고 육성하는 활동을 중심으로 추진하기로 하였다.

학생 재능중심의 여러 줄 세우기 교육

을 찾지 못한 학생들을 주위에서 가끔 보곤 한다.

이에 따라 광주교육청에서는 그동안 전국을 순도했던 교단 선진화 사업의 토대 위에 학생 개개인의 소질과 적성을 살리고 잠재력을 개발하는 여러 줄 세우기 교육인 '학생 재능중심 u-러닝 교육도시 건설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본 프로젝트는 작년부터 5개년 계획에 따라 추진 중인데, 많은 대학들도 이제 학생들의 잠재력과 창의성을 중요시 하는 대학입학사정관제도 도입을 확대해 가고 있는 시점인 만큼 교육의 본질 추구는 물론 시대적 요구에도 부응한다는 데 그 의미가 크다고 볼 수 있다.

내용은 학생 재능진단육성, 교실수업 지원, 학생 자율학습 지원, 인프라구축의 4가지 영역으로 나누어 31개의 학교에서 시범 운영을 하였고, 지난 11월 25일에는 그동안의 시범운영한 결과를 발표하고 검증받은 전국단위 성과발표 학술대회를 개최한 바 있다.

이날 기초강연을 한 서울대학교 문용린 교수는 "앞으로의 교육은 지식을 '집

모든 학교에서 학생 개개인의 재능을 검사도구, 관찰, 상담 등을 통해 진단하고, 학생·학부모와 상담을 통해 감성 재능을 살리고 약점 재능을 보완하게 된다. 이를 위해, 소집단 토의·토론학습 위주의 재능육성수업을 활성화하고, 특기·적성교육 기회를 확대하고자 한다. 아울러, 방과 후와 가정에서는 학생 재능 자율학습지원 콜센터를 활용하여 스스로 재능을 키워 하도록 하는 시스템을 확대하여 운영한다.

이와 더불어, 온라인 재능콘텐츠, u-스타와의 만남, 온라인 재능방송, 인터넷 재능방송 등을 활용하여 학생들의 재능발굴육성 활동 지원을 더욱 확대해 나간다.

이렇게 학생 개개인의 재능을 진단하고 발굴하여 키워나가는 교육활동을 체계적으로 꾸준히 추진해 나간다면, 훗날 광주학생들은 다양한 분야에서 저마다 지닌 재능을 살려 전 세계를 마음껏 누비는 글로벌 스타디오자로 태어나리라고 확신해 본다. 이는 교육자들의 소망이자 사명이기도 하다.

<광주교육청 교육정책과장>

청소년들 심야 PC방 출입 엄격 제한해야

며칠 전 PC방에 갔는데 카운터를 보는 알바생과 PC방을 찾아온 손님과 싸우고 있었다. 한눈에 봐도 옛돼 보이는 이 청소년은 대학생 신분증을 보이며 왜 막아서냐고 항의했다.

원래 PC방에는 밤 10시가 넘으면 청소년이 출입할 수 없게 돼있지만 이런 식으로 가짜 신분증이나 혹은 다른 사람 신분증을 들고 출입하는 사례가 부지기수로 많다. PC방에서야 손님이 들어와서 돈을 버니까 신분

증이 가짜든 진짜든 들고오기만 하면 입장을 허락한다. 그래서인지 요즘 PC방에 이런 가짜 성인이 위조 신분증 혹은 아예 신분증을 소지하지 않은 채 심야 PC방행을 즐기는 학생들이 적잖은 듯하다.

아주 어린 청소년들이 왠지 자질 PC방에 드나드는 것을 자주 본다. PC방 업주가 모두 다 내 동생, 혹은 내 자식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 부끄러워하지 않고 싶다. ▲유진규·여천시 신덕동

은펜칼럼

백강화



내가 만일 노벨문학상을 하나 추천할 수 있다면 현재 내가 긴 시간 읽고 있는 '시오노나미'의 '로마이야기'를 추천하고 싶다. 로마인 이야기는 한번 들고 읽기가 겁나서 그러지 한 권을 떼면 나머지는 반사적으로 읽게 되는 책이다. 장장 15권에 걸친 방대한 그 책을 놓을 수 없는 건, 고대 로마인들의 삶의 방식이 인류가 수없이 시행착오를 거듭한 바로 그 역사의 축소판이며 또한 해결점이 되리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다.

로마인들은 그 당시 마음만 먹으면 어떤 나라든 정복이 가능했다. 그러나

는 용서가 되지않 정권을 탐하는 집정관은 가져없이 처형을 당했다. 민회는 이런 원로원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평민들의 대변기관이었다. 그야말로 거미줄처럼 촘촘히 일인독재를 막는 이런 체제가 바로 로마법의 근간이다.

로마가 복속한 나라들은 즉시 로마법에 의해 다스려졌고 로마법은 그야말로 전제군주가 나오지 않을 만큼의 최소한의 법이라, 최대한의 개인의 자유와 경제활동을 보장받은 나라들은 로마 이전보다 훨씬 다방면의 발전을 이루게 되었다.

살아있는 로마인 이야기

아랍은 로마인들의 추구사상이 아니었다. 그들은 법과 철학과 명예에 따라 국민 모두가 웰빙하는 그런 나라를 구현하려 했을 뿐이다.

그러나 주범의 아반적인 군주 국가들은 그런 로마를 가만히 놓아두지 않았다. 그런 나라들에 둘러싸인 로마는 싸움을 걸어오면 시민 누구나 가장 용맹한 군인으로 변신했다. 최고 위치에 있는 집정관은 직접 전투지휘하는 장군이 되었고 나라의 대표들이 나라를 공동 운영하는 원로원은 바로 전신내각으로 돌변했다.

로마인들에게 최고의 죽음이란 바로 나라를 위해 싸우다 죽는 것이었다. 명예를 위해 싸우는 로마군은 싸울 때마다 백전백승하여 주변 나라를 차례로 복속하고 로마화를 시켜 나갔다. 더 이상 그들을 위협하는 세력이 없어졌을 때 그들이 로마를 중심으로 하는 세계 평화 즉 '팍스 로마나'가 실현되었다.

로마의 정치는 공화정(민주정치)으로 대별된다. 지금의 국회의원 원로원과 민회를 중심으로 모든 국적이 운영된다. 나라의 대표이자 원로원 소집자인 집정관은 원로원 의원 중에서 일년에 한 번씩 선출되며 그것도 독주를 막기 위해 두 명을 뽑는다. 전쟁에서 패배

그러나 로마 역시 율리우스 카이사르(시이저) 때에 이르러서 일인독주 시대로 서서히 접어들게 된다. 카이사르는 필승장군으로서 국민들에게 절대 인기를 얻었지만 부패한 원로원은 그 때문에 그를 제거하려 했다. 카이사르는 로마를 살리자는 명분으로 자기 군사를 몰아 로마로 진군하게 된다. 지금으로부터 쿠데타다. 쿠데타는 분명 불법이었지만 그 이후 카이사르는 로마법을 더욱 굳고히 하고 선정을 베풀었기에 로마뿐만 아니라 주변 국가들에 의해서도 신으로 받들어 지기까지 했다.

그러나 카이사르 이후의 황제들, 대표적으로 네로처럼 개인의 영달을 추구하는 경향들이 나타났지만 로마법에 기반을 둔 로마는 오랫동안 평화와 번영을 누리며 지금의 선진유럽을 기초했다. 이런 로마법의 가장 근간은 관용과 유연성이다. 로마는 하나의 이념이 아닌 끊임없이 만인의 선을 추구하는 법치를 모색하기에 진정한 세계평화를 구현할 수 있었던 것이다. 로마이야기는 결코 기원 전후 고대 인류의 이야기 가 아니다. 올해 정치진입을 꿈꾸는 선량들 중 최소한 로마이야기 정도를 숙독한 이라면 난 그를 주목하고 싶다. <주부>

광주일보는 '오피니언'면 기고중 분기별 최우수작을 선정해 '은펜칼럼'을 수여 합니다. 은펜칼럼은 이들 수상자들의 모임인 '은펜클럽' 회원들의 칼럼을 쓰는 코너입니다.

◇ 채택된 원고는 고료 드립니다.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주문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등 어떤 내용의 원고나 사진, 민화, 민명도 환영합니다. 채택된 원고는 고료도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柳濟喆 논설주간 申滄樂 편집국장 曹慶完			
1952년 4월 20일 創始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1업1간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우편번호 501-7111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독신침·배달안내		www.kwangju.co.kr	
편집국내 <대표 FAX> 222-4918)	사회 2부 2200-692 <F A X> 227-0118)	경영지원국 2200-511 <F A X> 222-8005)	문화홍보국 2200-541 <F A X> 222-0195)
편집부 2200-672	문화생활부 2200-661	광고마케팅국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정치부 2200-634	여론제작부 2200-679	<F A X> 227-9500)	<F A X> 227-9500)
경제부 2200-641	체육팀 2200-663	서울지사 02-773-9331	사 인 2200-536 서울지사
사회1부 2200-612	사 진 부 2200-691	<F A X> 02-773-9335)	
<F A X> 222-4267)	조 사 부 2200-571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4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